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23(금) ~ 2023.06.29(목)

제공일시 2023 07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6.23(금) ~ 2023.06.29(목)

제공일시 2023 07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영·프 생물다양성 크레딧 로드맵 발표

-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영국-프랑스 글로벌 생물다양성 크레딧 로드맵’의 출범을 발표했음
- 이 로드맵은 생물다양성 크레딧을 구매하고 자연 복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임
-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 크레딧과 유사한데, 기업이 자연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임
- 로드맵은 활발한 크레딧 거래를 위한 계획,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토착민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정한 소득 분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생물 다양성 크레딧에 관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 전,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음

(ESGToday, 2023.06.23) Mark Segal 기자

2. IFRS, 글로벌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공시 표준 발표

- 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26일(현지시각) 글로벌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공시 표준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음
- 공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어 기업은 2025년에 이 기준이 적용된 공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됨
- 엠마누엘 파베르 ISSB 의장은 공시 표준을 발표하며, “지난 10년 간 약 500여 개의 서로 다른 ESG 표준, 지표 및 공시가 쏟아져 나온 것은 우리의 회계 시스템이 개선되고 완성됐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다. ISSB가 하는 일은 회계 기반 언어로 만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밝혔음
- 이에 더해는 파베르 의장은 “ISSB는 ESG지표나 공시의 집합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검증 가능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종합 언어다”라고 말했음

(ESGToday, 2023.06.26) Mark Segal 기자

3. EU 자연복원법, 의회 환경위서 부결

- EU의 자연복원법(nature-restoration law)이 유럽의회에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음
- EU의회 환경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해당 법안을 두고 투표했는데, 44대 44로 부결됐고, 환경위는 의회 본회의에서 자연복원법 추진 반대 안건을 상정해 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육지 20%와 해역의 20%, 2050년까지 복구가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EU의회의 농업어업위원회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환경위원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회 환경위 투표는 의회 본회의의 입장 채택에 앞선 중요한 절차로서, 본회의 표결에서 환경위 결정이 뒤집히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초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ESGToday, 2023.06.27) Mark Segal 기자

1. 캘리포니아 '기업 탄소발자국 공개' 법제화 추진, 아마존 GM 대기업 대상

-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제정 절차를 밟고 있음
-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까지 받으면, 아마존, GM, 맥도날드 등 매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내 기업들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공개해야 함
-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언론 산호세인사이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두 개의 법안이 모두 상원을 통과했음
- 법안은 기업의 직접적 활동을 통한 배출량에 더해, 공급망 전반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업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분량까지 합산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비즈니스포스트, 2023.06.29) 이근호 기자

2. 5대 분야에 46.3조 정책자금 공급...핵심기업 체크리스트 만든다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점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음
- 5대 분야별 자금공급 규모와 집행률은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7조3773억원(47.4%) ▲미래유망산업 지원 9조5064억원(46.9%) ▲산업구조 고도화 9조9689억원(48.6%)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7조5425억원(83.3%) ▲기업경영애로 해소 11조9355억원(45.2%) 등임
- 금융위와 관계부처들은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도 마련키로 했으며,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임
- 우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 등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의 추가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뉴스, 2023.06.26) 김형섭 기자

3. 탄소흡수능력 정밀 측정...환경부, 기술 개발

- 정부가 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등 생태계 유형 별로 탄소 흡수 능력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나섰다
-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탄소 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관리하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측정·평가 방식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고유 계수도 개발할 예정임
- 아울러, 소관 부처 별로 관리하고 있는 탄소흡수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기반해법(NBS)을 적용해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면서 탄소흡수능력을 늘리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자연기반해법 기반 탄소흡수 증진 기술개발(2024~2027도)'도 추진할 예정임

(뉴스, 2023.06.28) 이소현 기자

1. 전기차 붐 올라타자... '하얀 석유' 캐는 글로벌 석유·가스기업들

- 엑손모빌, SLB,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에퀴노르 등 주요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이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음
- 주요 석유·가스 공룡들의 리튬 채굴 열풍은 미국, 유럽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움직임과 무관치 않는데,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로 석유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화석연료 기업들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기차로 다각화하고 있는 것임
- 석유 기업들은 특히 리튬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소금물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직접 리튬 추출법(DLE)을 상용화하려는 작업이 석유업계에선 한창 진행 중임
- 임페리얼 오일, 엑손모빌이 소유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DLE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리튬 개발 열풍은 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란 분석임

(아시아경제, 2023.06.26) 권해영 기자

2. 기후소송에서 기업 '그린워싱' 관련 소송 증가, 2022년 222건 가운데 26건

-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서 기업의 '그린워싱(climate washing)' 책임을 묻는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런던 정경대 그레덤 기후변화연구소가 내놓은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를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21년에 266건, 2022년에는 222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음
-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는 기업의 기후대응 공약 자체와 관련된 소송에서부터, 제품 원료 관련 소송 또는 기후 대응에 들어가는 투자나 지원을 과장되게 기술한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음
- 특히, 2022년에 제기된 기후소송 가운데 기업의 그린워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26건에 이르는 데, 보고서는 기업의 그린워싱 관련 소송 제기가 많아지는 이유를 놓고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향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바라봤음

(비즈니스포스트, 2023.06.29) 이상호 기자

3. 글로벌기업, 환경 보전 재생농업 시장 노린다

- 연간 14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생농업 관련 시장에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거액을 투자해 눈길을 끌고 있음
- 농자재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은 최근 재생농업의 주요 솔루션에 26억유로(3조6937억원)를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음
- 여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농민과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향상, 수자원 보전, 기후변화 완화, 토양 건강 개선,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 등의 목표를 모두 포함됨
- 바이엘은 생물성 작물보호제 시장의 초기 리더로서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2035년까지 15억유로(2조1323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농민신문, 2023.06.28) 이연경 기자

1. SK온·포드 합작사, 美 에너지부서 11.8조원 자금 확보

-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최대 92억달러(1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지원자금을 잠정 확보했음
- SK온은 블루오벌SK가 에너지부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에 따라, 92억달러 규모의 정책자금 차입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블루오벌SK가 잠정 확보한 92억달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임 블루오벌SK는 계약 체결로 확보하게 될 자금을 미국 켄터키주 1·2 공장 및 테네시주 공장 등 총 3개의 공장 건설에 투입할 계획임
-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블루오벌SK 3개 공장은 총 120GWh(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SK온이 미국 정책자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무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조선일보, 2023.06.23\) 이광영 기자](#)
[\(동아일보, 2023.06.24\) 광도영 기자](#)

2. LG화학,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국내 첫 양산…“배터리 수명 30% ↑”

-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단입자(단결정) 양극재 양산에 돌입하여 첫 생산 물량은 7월부터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단입자 양극재는 현재 시장 주류인 다입자(다결정) 양극재와 비교해,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음
- 단입자 양극재를 사용하면 가스 발생이 줄어 안정성이 높아지고, 배터리 수명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남
- LG화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배터리 용량도 1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음

[\(전자신문, 2023.06.26\) 정현정 기자](#)

3. 현대차·도요타도 배터리 직접 설계한다

- 그동안 배터리를 납품받아 생산 차량에 탑재하는 데 그쳤던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 설계에 뛰어들고 있음
-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설계에 뛰어드는 건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지금까지 배터리 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임
- 현대차는 자체 설계한 배터리에 NCM(니켈·코발트·망간) 계열로, 니켈 함량을 크게 높여 주행거리를 늘려서 배터리 제조사인 SK온에 위탁 생산할 예정임
- 도요타도 최근 LFP(리튬인산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2026년 LFP,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등 상용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으며 기술 구현에 자신감을 나타냈음
- 글로벌 전기차 1위 테슬라의 경우, 이미 배터리 파운드리화를 넘어 자체 양산 단계까지 진행됐음

[\(조선일보, 2023.06.27\) 김아사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6.23(금) ~ 2023.06.29(목)

제공일시 2023 07 0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대형 트럭에 대한 배출량 제한...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쟁점

(임팩트온, 2023.06.27) 최동훈 기자

- EU는 2050년까지 27개국 경제 전체에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에 대한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기준을 준비하고 있음.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새 트럭의 평균 CO2 배출량을 90%까지 줄이기 위한 2040년 목표를 제안했음
-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트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65%,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90%에 도달하는 등 5년마다 강화될 예정임. 이 규정에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넷제로 기술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음
- 반면 이는 제조업체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4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은 전기 또는 수소로 구동되어야 하지만, 소수는 연소 엔진을 보유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유럽 의회의 수석 협상자인 야닉 자도트 의원의 초안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 규제를 이산화탄소 감축 100%로 강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음. 자도트 의원은 EU가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65%, 95%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 강력한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에 지난 20일, EU 회원국들은 트럭과 버스를 포함한 중장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더 큰 규제를 지지하는 국가와 제안을 완화하기 바라는 국가로 나뉘게 됐음
- 프랑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내에서 1990년보다 배출량이 더 많은 유일한 주요 부문이 운송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국들에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음
- 또한 그는 이 규정을 2025년부터 7월 시행될 더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과 연결하여 이 규제를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로 7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지난 5월 EU의 8개 회원국은 유로 7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치며 집행위원회에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음
- EU 회원국 중에는 트럭 제조업체인 MAN과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을 필두로 EU의 탄소배출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이 있음
- 규제를 환영하는 다른 회원국에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가 있음. 핀란드는 이산화탄소 기준에 재생 가능한 연료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 가스를 강조했다.
- 오스트리아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30년과 2035년의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네덜란드도 트럭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함께 2040년 100% 감축 목표에 관해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는 위원회는 2030년 목표를 보완하고 2035년과 2040년에 더 야심 찬 목표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반면 몇몇 국가들은 제안이 너무 엄격하다고 우려했음 산업에서 자동차 생산 부문의 규모가 큰 체코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목표치를 “지나치게 야심차다”고 비판했음
- 폴란드는 이번 규제에 대해 EU 내 부유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일부 경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한다”고 비판했음. 폴란드의 환경부 차관은 “만약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규제는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탈리아는 2030년 목표가 특히 도전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공해 차량 외에도 보완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했음. 이탈리아의 길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장관은 “내연기관 차량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